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우준모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푸틴(Vladimir Putin) 현(現) 총리가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선언했다. 2008년 러시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될 경우 최장 1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우려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에서는 푸틴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통치 스타일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재설정(Reset)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다자적 협력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1. 머리말
2.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성격과 권력 승계의 특징
 - 가. 정치문화적 전통
 - 나. 러시아의 전환기적 특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논쟁
 - 다.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체제의 특성
 - 라. ‘메드베데프 대통령 - 푸틴 총리’ 체제의 실제
 - 마. 최고 통치자 권력승계 과정: 조합주의적 신군주제?
3. 푸틴의 대통령 권좌 복귀에 대한 다양한 해석
 - 가. 왜 다시 푸틴인가?
 - 나. 푸틴 체제에서 메드베데프의 역할
4. 푸틴의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
 - 가. 산적한 국내 현안
 - 나. 대외정책 현안
 - 다. 한국과의 현안
5. 맺음말

1. 머리말

- 푸틴(Vladimir Putin)은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함.
 - 지난 9월 24일 러시아의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전당대회에서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은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통합 러시아당의 대선 후보로 푸틴의 출마를 제안함.
 -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
 - 푸틴은 러시아를 5년 안에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10년 안에 신무기 도입과 현대화를 실현하여 군사강국 러시아의 면모를 회복시키겠다고 역설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이중권력’ 시대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감.
- 국내외 반응
 - “이게 러시아야! (Это Россия!)”
 - 러시아 국내 여론은 무덤덤하거나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주를 이룸.
 - 일부 반대세력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침체의 장기화를 경고함.
 - 세계 여론은 푸틴의 강하고 거침없는 정치·외교 스타일을 우려하는 분위기임.

2.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성격과 권력 승계의 특징

가. 정치문화적 전통

- 짜르의 전제정치와 소비에트 공산독재의 유산
 -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일인지배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 전통을 답습해 왔음.
 - 키에프와 모스크바의 군주제, 몽골압제, 제정러시아의 짜르(царь), 소련방 공산당 서기장 등으로 이어진 강력한 일인 독재체제의 전통이 존재함.

- 러시아인들은 외세의 침입과 강압적 통치의 역사 속에 고통스럽게 인내하는 법을 배웠으나 굴종하지는 않는 성향을 지님. 그들은 목표지향적 감정과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행동적, 비타협적, 극단적임.
- 17세기 이후 지속된 농노반란, 인민주의 운동과 볼셰비키 혁명이 그 사례임.
- 1993년 12월 ‘러시아연방 헌법’ 제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헌정질서를 구축함.
- 러시아 국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법률 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음.
- 소비에트 체제도 서구적 마르크스주의의 수입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통적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레닌이 시대상황에 맞게 개조한 것으로 해석됨.
- 1996년 대선에서 공산당 후보 주가노프(Gennady Zyuganov)가 선전한 것이나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푸틴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 그리고 2008년 대선에서 푸틴이 지명한 대선 후보 메드베데프가 당선된 것도 강력한 통치자를 지지하는 러시아적 정치문화의 단면임.
- 러시아에서 국가-사회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적 체제의 전통으로 설명이 가능함.
- 전제정치의 연속성은 경로의존적 방식으로 현대 러시아 정치체제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함.

나. 러시아의 전환기적 특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논쟁

- 탈소비에트 체제변화의 특성: 이행론과 전환론의 적실성 논쟁
 - 1990년대 초반 일군의 비교정치학자들은 민주화 이행론을 탈공산권 국가연구에 대입시켜 헌팅턴(S. P. Huntington)의 민주화 물결의 한 갈래로 해석함.
 - 소비에트학(Sovietology) 연구자들은 비교의 적실성 문제(체제의 성격·조건·정치문화·국제환경 등)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체제전환이라고 주장함.
 - 홈즈(Leslie Holmes)는 탈공산주의 물결을 특정 목표와 방향을 정해 놓고 출발한 이행이 아니라 단순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소연방 해체로 등장한 러시아를 단선론적 발전모델인 민주화 이

러시아에서는 국가-사회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적 체제의 전통으로 설명이 가능함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 집권기의

민주주의는 위임

민주주의 성격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지속하는

경우임

행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갈래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체제전환론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함.

-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민주주의의 진로는 가변적 요소가 많음.

○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과 한계

- 절차적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와 국민들에 의한 법률 제정 그리고 통치자와 통치정당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2인 이상의 후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주기적인 선거를 보장함.
-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여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
 - 포퓰리즘, 포괄정당, 중우(衆愚)정치, 민주적 전제주의 등의 폐단이 상존함.
- 실질적 민주주의는 법률과 제도적 기반과 함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의 힘, 즉 시민문화가 안착되어야 가능함.

○ 통치권력의 정당성의 원천

- 통치자가 지닌 권력의 정당성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 행사가 가능한 관계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통치자는 자신의 피치자로부터 자발적인 복종을 확보해야 함.
 - 립셋(Seymour M. Lipset)은 정당성의 개념을 ‘현존하는 정치 제도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신념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함.
 -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종, 즉 지지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한 합법적 경로를 통해 집적될 수도 있고,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한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순응이나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함.

다.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엘친, 푸틴, 메드베데프 체제의 특성

1)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 집권기의 민주주의

-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적 성격을 지님.
 - 위임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음.

-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나 정당 등 여타 정치제도나 사회조직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한을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함.
- 엘친 집권기는 소연방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추진했으나 한계를 노출함.

2) 푸틴 대통령 집권기의 민주주의

- 푸틴의 통치는 신권위주의적 안정화(neo-authoritarian stabilization)의 특징을 지님.
 - 신권위주의적 안정화란 민주적 헌정질서는 인정하나 민주주의 질서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말함.
- ‘주권 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의 등장
 - 대통령실 수석 부실장 겸 대통령 고문인 수르코프(Vladislav Surkov)가 러시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현실을 고려하여 토착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창안해낸 개념임.
 - 주권은 국가가 지닌 능력을 말하며 거기에는 경제적 독립성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포함됨.
 - 주권 민주주의는 투철한 국가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엘리트가 국가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통치하는 제도이므로 ‘국가관이 투철한(nationally-minded)’ 민족 엘리트 양성이 핵심 요건으로 간주됨.
 - 주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권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체제를 개방하려는’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삶의 양식이자 목표로 규정됨.
 - 주권 민주주의는 탈 소비에트 체제변혁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러시아가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현실적 도전을 극복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의 국가상으로 제시되었음.
 - 결국 주권 민주주의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두 가지 근본, 즉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대의제와 인민의 의지에 기초한다는 국민주권론의 이념을 배척하고 있음.
 -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주권 민주주의를 러시아 스스로가 민주적 변혁 경로를 개척하는 과정으로 해석함. 모든 국가는 근대화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외부의 힘에 의해 이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근대화와 발전은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

**푸틴의 통치는
신권위주의적 안정화
(neo-authoritarian
stabilization)의
특징을 지니고,
신권위주의적 안정화란
민주적 헌정질서는
인정하나 민주주의
질서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의미함**

메드베데프는 서구식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민주적 변혁을 주창하였으나,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침체를 겪어야 했고, 특히 리더십 약화로 인한 국민적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임

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푸틴 집권기는 옐친 집권기와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민주화의 퇴행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됨.

3) 메드베데프 집권기의 민주주의

- 메드베데프는 서구식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민주적 변혁을 주창하였으나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침체를 겪어야 했고 특히 리더십 약화로 인한 국민적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임.
 - 메드베데프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확립,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정당활동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혁을 시도함.
 - 2009년 9월의 연설이 “진진! 러시아(Россия, вперед!)”였음.
 - 경제·사회·정치·과학기술·외교 등 국가의 전 분야에 걸친 분야별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함.
 - 2008년 집권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산업구조 다각화,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함.
- 메드베데프의 서구식 자유주의 개혁가의 모습은 수사(修辭)에 그쳤으며 푸틴의 용인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실험에 불과했음.
 - 제한적으로 정치권 세대교체와 독직 등 부정부패 척결을 시도했으나 이를 푸틴의 실로비키파와 메드베데프의 자유주의파 사이에 벌어진 권력투쟁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실제

- 양두마차 혹은 이중권력체제로 묘사되었던 지난 4년간의 메드베데프-푸틴 체제는 사실상 푸틴의 섭정체제에 불과함.
 - 푸틴은 메드베데프에게 권력을 이양하기로 결정한 이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 즉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리의 권한을 강조한 바 있음.
 - 헌법 제6장의 내용을 보면,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예산편성, 통화 및 금융정책 수립, 보건, 교육, 환경, 국가안보, 시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 유지 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함.

- 2008년 2월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2020, 러시아의 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 하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임을 천명함.
 - ‘2020, 러시아 장기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 3만 달러 시대를 만든다는 것과 경제혁신, 교육강화, 부패척결 등을 강조하고 국가안보 강화를 역설함.

- 푸틴은 2007년 12월 총선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압승(64.3% 득표)을 이끌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었음.
 - 통합 러시아당은 국가두마 전체 450 의석 가운데 315석(70%)을 배정받아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함.
 - 득표율 7%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정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군소정당들은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 러시아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음.
 - 극우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지리놉스키(Vladimir Zhirinovskiy)의 자유민주당(40석)과 중도좌파 성향을 지닌 미로노프(Segey Mironov)의 공평러시아당(38석)도 친 푸틴 성향의 정당들임.

- 푸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러시아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대신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주권 민주주의 모델의 구체화 가능성).
 - 지난 5월, 푸틴은 강하고 민주적인 주권을 지닌 러시아 건설을 목표로 초당적인 친위조직 ‘전러시아인민전선(All Russia People’s Front)’을 창설하였음.

마. 최고 통치자 권력승계 과정: 조합주의적 신군주제?

- 엘친에서 푸틴으로, 푸틴에서 메드베데프로 그리고 다시 푸틴으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은 전임자가 계승자를 지목하고 선거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됨.
 - 이것은 소연방 시기 최고 통치자들의 권력 승계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임.
 - 소연방 시기에는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계승할 만한 유력한 후계자들이 항상 견제를 받아 축출되었거나 최고 통치자가 권력승계를 꺼려했던 인물이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양두마차 혹은 이중권력체제로 묘사되었던 지난 4년간의 메드베데프-푸틴 체제는 사실상 푸틴의 섭정체제에 불과함. 푸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러시아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대신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푸틴-메드베데프
'이중권력'은 푸틴의
권력유지를 위한 한시적
체제였으므로 푸틴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권력
분점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

-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은 군주제의 세습 방식과 같은 혈연간의 승계는 아니지만 조합주의적으로 승계되고 있음.
- 부(富)와 자원에 대한 통제가 대체적으로 통치 엘리트 핵심부와 그 가족들에 의해 조합주의적으로 승계되고 있기 때문임.
- 엘친의 딸들과 사위들에 이어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통치 엘리트 핵심부의 가족들도 국영기업체의 이사 등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

3. 푸틴의 대통령 권좌 복귀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 왜 다시 푸틴인가?

-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8년간 러시아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4배, 수출 3배, 주가 지수 12배가 증가하는 등 급속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함.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메드베데프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반발로 강한 국가와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능력을 보여준 푸틴에 대한 향수가 고조됨.
- 푸틴의 재등장에 대한 해석
 - 푸틴-메드베데프 '이중권력'은 푸틴의 권력유지를 위한 한시적 체제였으므로 푸틴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권력 분점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
 - 푸틴은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최장 2024년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이중권력 체제를 선택했으나, 이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권력분산은 위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푸틴 이후 메드베데프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여 2036년까지 현재와 같은 이중권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자원경제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전 분야의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상황임.
 - 통치 엘리트 그룹 내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역할은 푸틴이 적격임.
 - 푸틴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메드베데프를 총리로 기용한다고

약속했으나 메드베데프가 권력의 2인자로 굳건하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쿠드린(Alexei L. Kudrin) 재무장관 겸 부총리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메드베데프에 대한 통치 엘리트 그룹의 충성도는 높지 않음.
- 쿠드린은 해임되었으나 푸틴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재기용되어 푸틴을 보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메드베데프를 총리에 기용하더라도 메드베데프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개하면서 실세 총리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

○ 푸틴의 대통령직 재도전의 출사표

-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과 정치·군사·안보적으로 강한 러시아 건설을 약속함.
-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자유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서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
 - 메드베데프가 추진해 온 경찰 개혁과 부패 추방, 야권 시위 허용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 미국 및 외국 자본과의 공조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푸틴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레즈네프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함.
- 푸틴은 자신을 루스벨트(F. Roosevelt)와 드골(Charles de Gaulle) 등에 비유하면서 러시아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
- 푸틴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유망한 전략적 파트너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함.

나. 푸틴 체제에서 메드베데프의 역할

- 푸틴이 메드베데프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이유는 그가 보여 준 충성심과 신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메드베데프 수하의 통치 엘리트들이 푸틴 그룹과 대결하면서 권력 연장을 도모할 수도 있었으나 메드베데프의 권력의지가 불명확했고 보다 큰 틀에서 양측 모두가 소속한 조합주의적 틀을 훼손할 수는

**푸틴은 대통령직
재임기 시 메드베데프의
자유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서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

*러시아가 현재 직면한
과제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초래한 러시아의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개혁과
민주화 진전을 가로막아
국민적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경제적 과제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비중을
낮추고,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임*

없었을 것임.

- 12월 4일로 예정된 국가두마 총선에서 푸틴이 메드베데프에게 통합 러시아당 비례대표 1순위를 배려한 것 역시 조합주의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
- 푸틴은 통합 러시아당 내부의 복잡한 권력투쟁과 이해갈등의 숙제를 메드베데프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일정 정도 통합 러시아당과 거리를 두려는 계산임.
 - 푸틴에게는 초당적인 친위조직 ‘전러시아인민전선’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 통합 러시아당은 1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례대표 1번인 메드베데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에 직면할 것임.
 - 통합 러시아당은 국가두마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정당지지도가 41~4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07년 12월 총선 때의 64.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지난 9월 24일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 이후 지지도가 43~45% 정도로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당 간판을 푸틴에서 메드베데프로 바꿔 달게 된 상황에서 2007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통합 러시아당 내에서는 12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푸틴이 그동안 통합 러시아당이 담당해 온 역할을 ‘전러시아인민전선’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함.
- 푸틴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에 대통령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세력이 국가두마를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임.

4. 푸틴의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

가. 산적한 국내 현안

- 세계경제의 위기가 초래한 러시아의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개혁과 민주화 진전을 가로막아 국민적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색깔 혁명이나 월가의 시위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러시아 중산층 1백 만 명이 만연한 부패와 부의 불균등 분배 등에 염증을 느껴 해외로 이주했음(CSMonitor, 20110927).

- 자본가들의 자본 해외도피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카프카스 지역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정부 지원과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있음.
 - 시민민주주의 세력, 지방세력 등 반(反) 푸틴 성향을 지닌 인민대중들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발호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과거와 같은 가시적 성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러시아인들은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 번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극단적으로 목표에 전념하며 비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폭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경제적 과제는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 비중을 낮추고 제조업과 정보 통신, 서비스업 등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임.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재 부문의 가파른 성장과 국제유가의 회복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추세임.
 - 2010년 기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캐나다와 비슷하며 세계 11위의 규모임.
 - 푸틴의 공약대로 향후 5년 내에 세계 5위 규모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을 1조 달러 이상 늘려야 하며 이는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임.

나. 대외정책 현안

- 푸틴은 과거부터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단극(單極)적 패권체제에서 다자적 세계질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힘의 정치를 구사함.
 - 푸틴은 유라시아주의자 혹은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로 분류됨.
 - 푸틴은 미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기생충’이라고 극언하고 있어 경제 개혁과 성장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임.
- 2012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변화(regime change)가 순차적으로

2012년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권변화(regime change)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미국이 푸틴의 대외 강성기조에 맞대응 전략을 구사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재설정(reset)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임

**한러관계는 지난해 수교
20주년을 넘기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닌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은
유지될 것임**

진행될 예정임.

-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10월에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후임자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등극이 예상되며,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12월에는 한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정국불안정을 겪고 있음.
- 미국이 푸틴의 대외 강성기조에 맞대응 전략을 구사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재설정(Reset)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임.
 - 2009년 02월 제45차 뮌헨 안보회의에서 제시된 재설정 정책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관계가 구축됨.
 - 2010년 04월 미·러 양국은 실전 배치된 전략 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하는 'NEW START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상호간 무기체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함.
 - 푸틴의 '지정학적 현실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경계해야 함.

다. 한국과의 현안

- 한러관계는 지난해 수교 20주년을 넘기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닌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은 유지될 것임.
 - 푸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창출하는 데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임.
 - 푸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마련 등 한반도 현안을 기회적 요인으로 삼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할 것임.
- 남-북-러 가스관(PNG) 연결사업
 - 한러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러 간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이나 여전히 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금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기대함.
 - 양국 대통령은 11월 중으로 G20, APEC, EAS 등 수차례의 조우 기회가 있음.

- TKR-TSR 연결사업과 북극해에 대한 상업적 항행 사업을 추진함.
 - 물류비 절감과 북한체제 개방유도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유익한 사업이나 북한변수가 최대 장애요소로 상존함.
 - 러시아는 북극해에 대한 상업적 항행로 개발보다 TSR 활성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북극해 개발은 중장기적 사업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안보적 고려가 필요한 반면 TSR 물동량 확대는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베리아,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 러시아는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
 -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남도발을 억제하려면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함.
 - 러시아의 대 한국 경제협력 프로그램 실현 의지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봄.

5. 맺음말

- 푸틴의 재집권에 거는 기대와 전망
 - 푸틴은 지난 12년간 러시아 정치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탈법적 조치를 자행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음.
 - 2012년 3월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푸틴의 러시아가 민주화 이행의 방향이든 경성 권위주의화의 방향이든 간에 급격한 정치변동에 빠져들 가능성은 낮음.
 - 러시아는 서구와는 다른 가치와 신념, 태도를 지닌 국가이므로 러시아적 특수성을 발현시키면서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발전국가로 나아가 갈 것으로 보임.
 -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꿈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이제 남아 있는 관건인 어떻게 꿈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과 방법에 집중해야 할 것임.

러시아는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

**한국은 러시아의
대외정책기조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공조할 분야와 대응할
분야를 정리할 필요**

- 한국의 정책적 대응
 - 러시아의 대외정책기조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공조할 분야와 대응할 분야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의 강화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불가피한 보편적 성격임을 밝히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의 구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함.
 -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편중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노골적인 불쾌감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음.
 - 남·북·러 가스관(PNG) 연결사업, TKR-TSR 연결사업, 북극해의 상업적 항행, 자동차와 정보통신, 가전분야, 천연자원 등 실현가능한 경제협력 분야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러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우준모

現 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동방학대학교 국제관계 및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외대 두뇌한국 21(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에서 전임 연구원을 역임했음. 연구 분야는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 외교정책, 지정학임. 주요논문으로는 『러시아 민주변혁의 진로』, 『러시아 대통령제의 발전과정과 전망』 외 다수의 논문과 공동저서 등이 있음.

참고문헌

- 우준모. “러시아 민주변혁의 진로.” 『평화학 연구』. 제10권 4호(2009).
- 정한구. “푸틴-메드베데프 체제의 출범과 러시아 정치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2009).
- 『중앙일보』기사.
- 『연합뉴스』인터넷 기사.
- 『한겨레 21』. 제880호 (2011.10.10).
- Макаркин, Алексей. “Дилемма Алексея Кудрина.” *Политком.ру* (2011.09.26).
<http://www.politcom.ru/print.php?id=12616> (검색일: 2011.10.12).
- Цыбульский, Владимир. “Премьер, или Туда и обратно,”
<http://lenta.ru/articles/2011/10/18/putin/> (검색일: 2011.10.13).
- Черняховский, Сергей. “Медведев и медведи: Электораль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Новая Политика*. (2011.10.14). <http://www.novopol.ru/text110786.html>
 (검색일: 2011.10.23).
- Шевцова, Лилия. “На смерть тандема.” *Профиль*. (2011.10.03).
<http://carnegie.ru/publications/?fa=45682> (검색일: 2011.10.13).

* 이 발제문은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나 언론 보도 내용을 폭넓게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학술논문 형식의 글이 아니므로 세세한 사항에 대한 인용표시를 생략하였음을 밝힙니다.

JPI 정책포럼 현황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3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